

전두환 회고록 손배 2심 선고, 내달 연기

전두환 유산, 이순자 한정승인 뜻과 달리 손자녀 3명 공동 상속 원고 손자녀 3명에 대한 소 취하서 제출 “피고 동의 절차 필요”

1심에서 5·18민주화운동 역사를 왜곡했다는 판결을 받은 전두환 회고록 관련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이 소송 수계인에 대한 소 취하 확인 절차에 따라 연기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최인규 부장판사)는 5·18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 조카 조영대 신부가 고 전두환씨(저자)와 아들 전재국씨(출판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오는 17일에서 다음 달 14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전두환 상속 관계 정리와 소 취하 확인 절차에 따라 선고를 연기했다.

애초 지난 5월 피고 전두환 법률대리인은 마지막 변론기일 때 “지난해 11월 23일 사망한 전두환의 법정 상속인 지위를 부인 이순자씨가 단독으로 이어받겠다”는 한정 승인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피고 측은 지난 10일 재판부에 낸 석명준비명령 답변서에 부인 이순자씨와 손자녀 3명 등 4명이 전두

환 유산을 공동 상속한다고 했다.

전두환 자녀 4명 모두 상속을 포기해 민법상 부인 이씨와 손자녀 10명이 상속인이 됐는데, 손자녀 10명 중 7명만 상속을 포기하고 3명은 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이다.

원고 측은 피고 측이 한정 승인 입장을 번복한 것을 확인, 소송 수계인인 해당 손자녀 3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취하하겠다고 지난 12일 소 취하서를 냈다.

원고 측은 역사 왜곡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재판인 만큼, 앞선 변론 과정에서 부인 이씨의 상속 지분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청구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재판의 역사적 의미를 고려해 손자녀에게까지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다.

다만, 피고 측은 소 취하에 대한 동의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동의 절차가 필요해 선고기일을 연기했다.

민사소송법 266조 소 취하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266조 6항은 소 취하 서면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소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한다.

원고 측은 피고 측이 기존 입장과 달리 전두환 유산을 한정 승인하지 않고 공동 상속한 데다 소 취하에 대한 동의서를 내지 않아 선고가 미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피고 측은 지난해 12월 소송 수계 절차를 밟아달라는 원고의 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미루다 재판부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올해 5월에서야 한정 승인하겠다는 의사만 밝혔다. 출판자인 아들 전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상속과 무관하게 유지된다.

앞서 1심은 2018년 9월 전두환씨가 회고록에 적은 내용 70개 중 69개는 허위 사실로 인정돼 5·18단체의 명예를 훼손한다며 7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69개 내용을 삭제하지 않으면 출판·배포를 할 수 없다고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5·18 경위와 진압

경과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서술을 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본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질 경우 전두환씨가 헬기 사격·암매장·간간인 학살 등 자신의 만행을 전면 부인한 것을 재입증하는 판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씨의 군사 반란과 뇌물 범죄 추징금 2205억 원 중 집행이 이뤄진 건 1249억 원(57%)이며, 나머지 956억 원은 미납 상태다. 추징금은 상속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전씨가 내지 않은 지방세 9억 8200만 원은 상속인이 납세 의무를 승계받아 체납 세금을 내야 한다.

전씨는 이와 별개로 회고록에 5·18 헬기 사격을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과립치한 거짓말쟁이라고 기술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형사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전씨와 검찰은 항소했으나 전씨 사망으로 공소 기각됐다.

전씨는 형사재판 1·2심 모두 재판부 이송 신청과 관련된 신청을 잇달아 내면서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려 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완도해경, 막바지 휴가기간 응급환자 잇따라 이송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정수)는 지난 주말 섬마을에서 응급환자가 잇따라 발생해 긴급이송에 나섰다 밝혔다.
완도=기동취재본부



담양소방,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강화대책 추진
담양소방서(서장 박상래)는 새 정부 초기 화재예방 집중 강화기간 중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화재예방 안전대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담양=박종영기자



광양소방 119생활안전대, 차량 문 개방훈련에 '구슬땀'
광양소방서는 차량 갇힘 사고에 대한 구호 능력을 높이기 위해 관내 폐차장에서 차량 문 개방 숙달 훈련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광양=기동취재본부



무안소방 생활안전순찰대, 교통사고 현장 수습
무안소방서(서장 박의승) 최근 현장면 119생활안전순찰대는 활동 중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발 빠른 수습에 나서 2차 사고 등의 피해를 예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무안=이성기기자



광주 동부소방, 추석연휴 대비 화재안전대책 추진
광주 동부소방서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대비하여 화재안전대책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슬비기자



나주경찰, 제70대 박상훈 나주경찰서장 취임
나주경찰서는 지난 16일 오전, 2층 영남마루에서 제70대 박상훈 나주경찰서장 취임식을 가졌다.
나주=송준표기자

‘먹는 치료제’ 고령층 처방률 18.7%뿐...“적극 처방해야”

먹는 치료제 처방 50% 이상 증가, 60세 이상은 저조

코로나19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의 먹는 치료제 처방률이 18.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 당국은 먹는 치료제 투약의 효과를 강조하며 적극적인 처방을 당부했다.

16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8월 첫째 주 먹는 치료제 처방 건수는 2만5687건으로, 전주(1만6082건) 대비 50%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60세 이상 확진자 수 대비 처방률은 전주 대비 1.7% 상승한 18.7%에 그치는 등 여전히 저조해 적극적인 처방이 요구된다는 게 방역 당국의 설명이다.

국내에서 활용하는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는 파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가 있다.

파스로비드는 만 60세 이상이거나 12세 이상 중 면역저하자 또는 기저질환을 가진 고위험군 환자에게, 라게브리오는 증상 발현 5일 이

내인 60세 이상·40세 이하 기저 질환자·면역저하자 중 파스로비드 사용이 어려운 이에게 처방된다.

특히 요양병원·시설 환자 등 60세 이상 고위험군에게는 확진 초기 먹는 치료제 투약이 중증화 위험을 63%까지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당국은 밝혔다.

이에 당국은 처방기관 확대, 의료진 대상 의약품 정보 추가제공 등 처방지원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파스로비드의 경우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의약품이 최소 23종에 달하는 등 의료진이 처방을 쉽게 내리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의료 현장형 처방 가이드라인’을 대한의사협회와 공동으로 제작하고 있다.

또 파스로비드 복용이 제한되거나 금기되는 환자에게는 라게브리오 처방을 적극 권고하고, 삼키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연하곤란’ 환자에 대해서는 라게브리오를 현탁액 형태로 투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방대본은 이달 초 먹는 치료제 94만2000명분에 대한 추가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파스로비드 80만명분, 라게브리오 14만2000명분이다. 특히 파스로비드 처방불가 환자 등에 대한 라게브리오 처방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8·9월 중 라게브리오 14만2000명분을 우선적으로 국내에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진료과목과 관계없이 외래처방이 가능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확대를 추진하고, 조제 가능한 담당약국을 기존 1082개소에서 2175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요양병원·시설 환자를 대상으로 먹는 치료제 처방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적극적인 처방을 계속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최이슬기자



굴삭기 동원해 수해 복구 작업
16일 오후 서울 동작구 흥신대입구역 인근 수해 피해 현장에서 굴삭기 수해 복구 지원 관계자들이 굴삭기를 동원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스

“누가 애 낳으래” 제주행 항공기서 부모에 폭언 40대 입건

제주행 항공기에서 아이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폭언 등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A(46)씨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4시10분께 김포에서 제주로 향하던 항공기에서 갓난아기가 울자 아기의 부모에게 욕설과 고성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승무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향해 ‘누가 애 낳으래’, ‘왜 피해줘 xx야’라고 말하며 행패를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A씨는 피해 부모에게 짐까지 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공항경찰대에 인계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뉴스스